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주요 후보자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천주교 의정부교구, 수원교구 정의 평화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 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5월 21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정의당 이홍우 후보, 민중당 홍성규 후보에게 ‘생명과 인권, 평화 증진, 생태 보호, 인간 노동, 정치 공동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등 총 6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정책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5월 29일(화) 오후 5시까지 회신을 부탁하였고, 6월 13일 지방선거일 이전에 취합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정의당 이홍우 후보, 민중당 홍성규 후보로부터 답변서가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서 답변 요약 및 답변 평가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책질의의 취지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선에 부합하는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음을 가르치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사목 헌장 76항)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 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 평화위원회

※ 6.13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서 전문과 연결되는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 QR코드 관련 앱이나 포털사이트의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13 경기도지사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답변서 요약

(표의 후보 명은 정당 의석수에 따른 순)

[생명권과 인권]

1.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최소한의 방어능력도 없는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고의적 낙태 반대, 인간 배아 복제 연구 금지 등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혀왔습니다.

1-1.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의적 낙태 반대	
이재명	기타	의견 표명 없음
김영환	기타	성별감별 등 생명경시의 낙태 반대
이홍우	반대	낙태 허용
홍성규	반대	낙태 허용

1-2. 배아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	
이재명	기타	의견 표명 없음
김영환	기타	불치병 치료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활용 동의
이홍우	반대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반대
홍성규	반대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반대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이미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로 보기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 폐지	
이재명	찬성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
김영환	찬성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
이홍우	찬성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
홍성규	찬성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

[평화증진] - 남북관계

2. 한국 천주 교회는 전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오랜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고, 지방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1.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공동 선언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재명	찬성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김영환	찬성	4.27 판문점 선언 지지
이홍우	찬성	4.27 판문점 선언 지지
홍성규	찬성	4.27 판문점 선언 지지

2-2.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한반도 상황 인식
이재명	한반도의 과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항구적 평화 조성임. 어려운 길이지만 의미있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임.
김영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시작. 남한의 선언적 공표와 희망만으로 풀 수 없는 것이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임.
이홍우	남북관계의 대전환기.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하여 평화협정 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함.
홍성규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 종식,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시작.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해야 함.

2-3. 향후 한반도 평화시대에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계획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계획과 정책
이재명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남북교류의 중심지, 평화와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듦.
김영환	경기북부를 평화공단으로 조성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
이홍우	남북간의 경제협력, 방향이 중요. 개성공단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유치.
홍성규	한미 SOFA 전면개정 협상 경기도가 주도. 평화통일 생태 자치도 선포.

[생태 보호] - 탈핵,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

3.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소 운영에 안전성, 친환경, 경제성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어 많은 나라가 핵발전을 줄이거나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갈수록 악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경기도의 주요 과제입니다.

3-1. 탈핵(원전의 단계적 전면 폐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의 단계적 전면 폐쇄	
이재명	찬성	원전의 단계적 전면 폐쇄에 동의
김영환	기타	종합적계획 통해 탈핵 추진, 산업계의 대비없는 탈핵 우려도 경청
이홍우	찬성	원전의 단계적 전면 폐쇄에 동의
홍성규	찬성	원전의 단계적 전면 폐쇄에 동의

3-2.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소비 절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에너지 자립도, 재생에너지 확대, 소비 절감에 대한 정책 수립 방안
이재명	경기 북부 친환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 소비 절감을 위한 의식 고취를 위해 에너지 체험단지, 리조트, 에너지 자립 마을 등 설립 운영.
김영환	현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기획부터 실행내용과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할 것임.
이홍우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로드맵을 마련, 2030년 화석연료 및 열병합발전소 전면 중단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면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홍성규	‘재생에너지 3020’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 강화.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통제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

3-3. 후보자들의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을 적어주십시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이재명	25%
김영환	2030년까지 37%
이홍우	2030년까지 30%
홍성규	22%

[생태보호] - 4대강 재자연화

4.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에 3개의 보를 세워 강을 막은 이후 홍수 예방 효과도 없고 남한강의 수질은 더욱 악화하여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총체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1. 4대강 16개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강 재자연화	
이재명	찬성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동의
김영환	찬성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동의
이홍우	찬성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동의
홍성규	찬성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동의

4-2. 4대강 사업의 피해지역인 두물머리 유기농지와 피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물머리 유기농지와 농민 지원 대책	
이재명	당시의 기록, 현재상태,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정밀분석 연구하여 농민피해 최소화.	
김영환	기존 정부와 지자체가 내린 민관협의회 종결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임.	
이홍우	본래의 계획대로 생태공원 조성 실행 및 피해 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	
홍성규	두물머리 농민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도지사가 되면 함께 관철하겠음.	

[인간노동] - 청년실업

5. 청년 실업을 교육, 복지, 노동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청년 보장제” 도입을 선언하여 청년들의 자립권, 생존권, 노동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청년 보장제 도입	
이재명	찬성	청년 보장제 도입 취지 동의
김영환	찬성	청년 보장제 도입 취지 동의
이홍우	찬성	청년 보장제 도입 취지 동의
홍성규	찬성	청년 보장제 도입 취지 동의

5-1. 귀 후보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과 공약은 무엇입니까?

	청년 정책과 공약	
이재명	청년배당 경기전역 확대, 청년주거복지 확대,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운영 등.	
김영환	문화예술 ‘10·10·10’ 시행 (문화사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및 R&D 수퍼밸리 양성 (신성장 동력 개발, 판교-용인 과학기술 클러스터 개발 등)	
이홍우	청년 공정출발 지원금 지급, 경기도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3%에서 5%로 확대, 청년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홍성규	청년월세 10만원 조례제정 / 도내 공기업 공무원 청년채용 확대 청년 쿼터제 도입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16세 이하 / 대학생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정치 공동체]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

6.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감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도입 및 독립성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이재명	찬성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동의
김영환	찬성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동의
이홍우	찬성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동의
홍성규	찬성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동의

6-1 무기명 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표결을 방지하고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예산안, 조례안, 결의(동의)안에 대한 100% '기명 투표'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기명 투표실시	
이재명	찬성	기명 투표 실시 동의
김영환	찬성	기명 투표 실시 동의
이홍우	찬성	기명 투표 실시 동의
홍성규	찬성	기명 투표 실시 동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 주거와 복지

7. 지방정부 차원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지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지원 확대	
이재명	찬성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동의
김영환	찬성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동의
이홍우	찬성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동의
홍성규	찬성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동의

7-1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할 방안으로 보육, 장기요양시설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이재명	찬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동의
김영환	찬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동의
이홍우	찬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동의
홍성규	찬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동의

7-2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전망에 대한 의견과 그에 대한 현재 우리의 우선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저출산 초고령화 대책
이재명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중·고·대 돌봄체계 구축과 공보육 강화, 청년지원 정책, 어르신의 건강, 일, 여가 지원.
김영환	저출산은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더해진 결과임. 엄마가 일과 육아까지 전담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원인 중 하나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 돌보미’임금 보전을 통한 육아 지원,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추진.
이홍우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임. 양육의 책임을 여성이 아닌 남녀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 육아휴직에 ‘아빠 의무할당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료 지원, 0-12세 아동 주치의제 도입 등.
홍성규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 이 높아져야 출산율이 높아짐. 무상의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원-스톱 돌봄체계 구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

7-3.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에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이주 노동자와 난민 지원 정책
이재명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정책 추진
김영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2세 지원정책 강화, 인권보장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
이홍우	이주여성상담센터 확대,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등 다문화가정지원 조례 운영 내실화
홍성규	이주민 다문화가정 권리 보호 조례제정

6.13 경기도지사 선거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 <생명과 인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하느님께서서는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창세 9,5)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 즉 전쟁, 살인, 낙태, 인간배아 파괴, 안락사, 고의적 자살 등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사목헌장, 27항; 생명의 복음, 53항 참조).

"(공권력은)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곧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56항)

1-1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

- 1) 이재명 후보는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 2) 김영환 후보는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 기타의견으로 성별감별 등 생명경시의 낙태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3) 이홍우 후보는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낙태 허용의 견해를 밝혔다.
- 4) 홍성규 후보는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낙태 허용의 견해를 밝혔다.

1-2. 배아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 1) 이재명 후보는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 2) 김영환 후보는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기타의견으로 불치병 치료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제한적 활용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3) 이홍우 후보는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4) 홍성규 후보는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3.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 1) 4명 후보 모두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평화증진- 남북관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선익 보호,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 중시, 형제애의 끊임없는 실천 등이 없이는 평화는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 평화는 '질서의 고요함'이다. 평화는 정의의 결실이며 사랑의 결과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04항).

"두 정상의 만남은 투명한 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화해와 되찾은 형제애를 바탕으로, 마침내 한반도의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

(4월 25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 메시지 中)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의 미래를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의 사건이자 이 땅에 희망의 복음입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대한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메시지 中)

2-1.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

1) 4명의 후보 모두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의 의견을 밝혔다.

2-2 현재의 한반도 상황 인식에 대하여

1) 이재명 후보

“폭력은 폭력을 통해서 눌러지지 않습니다. 폭력은 오직 평화를 통해서만 극복됩니다.”(2014년 7월 20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 평화를 통해 폭력을 극복하려는 한반도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조성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는 국제 사회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2) 김영환 후보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남북관계를 보수정권 지난 9년 동안 50년 전 냉전 시대로 돌려놓는 시대착오적 뒷걸음질이 있었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남북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됨. 단, 지금이 평화 및 대화 분위기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함께한 강력한 대북압박의 효과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음.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았음. 물론 지금 그 경과라고 본다면 짧은 기간 동안 정부 노력에 평가.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일. 문제는 남북 간 대화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미국 등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와 함께 이들과의 동의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남한만의 선언적 공표와 희망만으론 풀 수 없는 것이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임.

3) 이홍우 후보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북미회담이 열리느니 마느니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대전환기에는 항상 약간의 동요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북한이 평화의 동반자가 되도록 설득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협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홍성규 후보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을 종식 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열리고 있음. 하지만 분단에 기생해 왔던 국내 적폐세력들과 미국의 군수자본

등의 거세 반발도 예상. 남과 북 해외의 민족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단결하여 나서는 난관을 이겨내야 함.

2-3 평화시대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1) 이재명 후보

-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중심지
 - 정부의 한반도를 H자로 연결한 새로운 신경제지도 중심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와 DMZ 환경·관광 벨트가 경기도를 교차합니다.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 조성, 특구 개발을 포함한 경기북부 일대의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경의·경원선 연결사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남북교류의 중심지
 - 경기도는 남북한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남북교류의 중심지를 만들겠습니다. 임진강 남북공동수계관리, 말라리아와 병충해 남북공동방역, 북한 산림녹화 지원, 미세먼지 원인 제거를 위한 남북협력체계 구축, 31개 시·군의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지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경기도형 남북교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 관광 중심지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를 포함하여 접경지대를 생태환경과 평화관광지구로 특별 개발하여 긴장과 도발의 분단지대를 평화의 상징지대로 조성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찾고 무엇보다 남북 주민이 만나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속도에 따라 DMZ를 관통하는 남북 연계 관광을 경기도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나 농촌·축산 체험 관광특화단지 등 기존의 정책아이디어들을 모으고, 다듬고, 더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에서 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2) 김영환 후보

- : 앞에 서술했듯이, 한반도 평화는 남한만의 노력만으론 불가능. 그러나 남한에서 그리고 경기도 등 각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함. 저의 공약에도 이 부분이 중점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음. 경기 북부를 '평화공단'으로 조성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임.
- 미군반환 공여지 유희지 및 기반시설 활용, 김포, 파주, 연천 등 북부 접경지대의 미군반환 공여지 등을 활용해서 공단을 조성하고, 북측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남한 속 개성공단'
 - 남북 평화협상 추세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등의 정책/공약 내용이 있음

3) 이홍우 후보

: 남북간의 경제협력,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를 악용하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경제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갑질문제를 전파하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공정한 경제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해야 합니다. 난개발이 아니라 환

경을 보호하는 경제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서 미세먼지 없이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연계해서 제2개성공단과 같은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DMZ를 중심으로 상태역사관광지구로 지정해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겠습니다.

4) 홍성규 후보

: - 주권 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미 SOFA 전면개정을 위한 협상을 경기도에서 주도하겠다.

- 중앙정부와의 공조, 행정권 발동으로 경기도 6,370만평에 이르는 주한미군기지의 사용료와 통행료를 징수하여 도민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 현재 일방적이고 강압적,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고 있는 수원 군 비행장은 폐쇄를 통해 진정한 평화, 상생을 선언한다.

- 경기도와 황해도 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접경지역 남북농업협력지구를 대규모 조성한다. 이를 통해 남북 쌀 자급 요구량 850만톤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기술 등 공동계획 수립, 남북농민 추수한마당 성사 및 다양한 농업교류를 실현한다.

-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문화예술, 체육 등 부문 직능별 다양한 경기도식 풀뿌리 교류사업을 전개한다.

- 목포-새만금-평택-인천-개성공단-신의주-중국으로 이어지는 종단 철도를 이용한 육로교류의 중간 기착지 구축하여 유라시아횡단 철도와 연결을 추진한다.

- 평택, 화성 - 북의 해주, 중국과 바닷길을 열고, 무역특구로 지정 중국-한반도간의 무역,물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겠다.

-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역개발 패러다임에 따른 경기 분도가 아닌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접경지대인 경기북부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지역으로, 남북경협, 환경문화생태, 통일한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대안체제 구축으로 특별자치도 비전을 제시한다.

▲ <생태보호- 탈핵,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핵발전의 문제가 이해득실에 따른 정책적 타협이나 강요된 희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 모두의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절제와 희생을 포함하는 각자의 결단을 통해서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정부 당국은 이러한 개인들의 성찰과 결단을 토대로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수호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참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촉구합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2013.10.17.)

“우리는 엄청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석유와 더불어 소비량은 적지만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점진적인 대체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야 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가 적은 대안을 고르거나 잠정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찬미받으소서, 165항).

“‘탄소 배출권’ 거래 전략은 새로운 형태의 투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오염 가스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환경에 대한 그럴듯한 노력을 가

장한 줄속으로 흐르는 안이한 해결책이어서 결코 현재 상황에 맞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일부 국가와 지역의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171항).

3-1. 탈핵(원전의 단계적 전면 폐쇄)에 대해

- 1) 이재명 후보, 이홍우 후보, 홍성규 후보는 원전의 단계적 전면 폐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 2) 김영환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에너지 대책 등 종합적 계획을 통하여 탈핵 추진, 산업계 등의 '대비 없는 탈핵에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2. 에너지 자립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안에 대해

1) 이재명 후보

- 경기 북부를 친환경 재생 에너지클러스터로 집중육성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파주, 연천, 포천에는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짓고, 동두천, 양주 등에는 에너지 신산업 생산단지를 건설하며, 경기북 부의 대학과 연구소에는 에너지 연구개발(R&D) 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경기도가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주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 또한, 소비 절감을 위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고양 등에 에너지 체험단지, 리조트,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설립·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구형 조명등을 LED 등으로 교체, 적정 냉난방 온도유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2) 김영환 후보

새로운 도지사가 나올 때마다 다른 정책을 내세우려 하고 있고, 차별화를 꾀하다 보니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음. 내가 도지사가 된다면 지금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기획부터 실행내용과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할 것. 그래서 전임 도지사가 준비한 에너지 대책을 성실하게 인수하여 진행할 것임.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별 계획도 검토하여 당초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임.

3) 이홍우 후보

-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화석연료 및 열병합발전소 전면 중단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옥상 등 도시지역 소규모 태양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농촌태양광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민관협치 실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독립 법인화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협약에 따라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1.5도를 목표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37%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기준인 22%에 미달하는 15.2%에 그치고 있습니다.

4) 홍성규 후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관련 지자체 권한을 확대 강화하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 외부 민간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통제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제정.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기업 투자 횡포 방지와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배제되거나 외지인의 이익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역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명시.

3-3.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 | | |
|-------------------------|-------------------------|
| 1) 이재명 후보 : 25% | 2) 김영환 후보 : 2030년까지 37% |
| 3) 이홍우 후보 : 2030년까지 30% | 4) 홍성규 후보 : 22% |

▲ <생태보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다. 그것은 공동의 보편적 의무, 공동선을 존중할 의무의 문제이다.... 인류의 공동 유산인 환경에 대한 책임은 현재의 요구만이 아니라 미래의 요구로 까지 확산된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다(간추린 사회교리 466-7항).

"욕심으로 인한 경솔한 개발의 폐해가 우리 자신과 후손에게 지워질 때, 이 시대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에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창조주께서 몇 만 년을 두고 가꾸어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 문제와 4대강살리기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입장', 2010.3.12.)

4-1. 4대강 보 철거 등 재자연화에 대한 견해

- 1) 4명의 후보 모두 4대강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4-2. 4대강 사업 피해지역인 두물머리 유기농지와 농민 지원 대책에 대해

1) 이재명 후보

경기도 생명의 근원인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강 변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 피해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4대강 사업 당시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지역 농민들과 3년에 걸친 논의 끝에 관광지가 아닌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팀을 꾸려 당시의 기록, 현재 상태, 지역 농민들의 의견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한강과 그 주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지키고, 동시에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2) 김영환 후보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내린 협의기구 종결 결정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할 것임. 종결 결정에

다른 내용과 기존 협의회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한 검토나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임. 그 과정에서 농민과 민관 협의회,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최적의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임. 만약 최종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한다면, 지사가(내가) 직접 나서 정부를 적극 설득할 것임. 또한 최적의 방안이 나오더라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하지는 못할 것임.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음. 대부분이 동의하고 공감하며, 생태와 미래를 위해 결론이 나온 후에 일부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소통을 통해 설득할 것임

3) 이홍우 후보

본래의 계획대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계획을 실행하고 양평만의 친환경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수도권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겠습니다.

4) 홍성규 후보

두물머리 농민들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함께 관철하겠습니다.

▲ <인간노동- 청년실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높은 실업률, 낮은 교육 제도, 직업 교육과 고용 시장의 높은 벽은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인간적 직업적 성취에 이르는 길에 큰 방해가 된다. 실제로, 실업자나 비정규 취업자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인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배척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간추린 사회교리, 289항).

5. “청년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자립권, 생존권, 노동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주장에 대하여,

1) 4명의 후보 모두 청년 보장제 도입의 기본 취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5-1. 후보들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과 공약

1) 이재명 후보

- 첫째,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 성남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을 보듬고 격려하겠습니다.
- 둘째, 생애 최초 국민연금을 지원.
 -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도래한 청년들의 첫 국민연금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셋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등록금에 허리 휘는 청년들과 학부모님들 힘내십시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기도가 부담하겠습니다.

- 넷째,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 군 입대한 자식이 혹시나 다칠까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의 걱정, 경기도가 대신 하겠습니다. 군 입대 청년들 모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섯째,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
 -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출산을 제고를 위한 아이 사랑 주택 보급, 산업단지와 창업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기숙사를 공급하겠습니다.
- 여섯째,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공간인 경기청년공간 운영과 채용문화 개선 위한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은퇴-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창업 멘토단을 운영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 일곱째, 경기도의 좋은 청년 정책 계승.
 - 남 지사의 재직자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시리즈 가운데 청년계층의 갈등을 조장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청년연금을 제외한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사업,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지원금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여덟째 청년 정책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운영.
 - 현재 아동 청소년과 소속 청년지원팀으로 존재하는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해 청년지원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 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 정책 위원회를 강화해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김영환 후보

- 문화예술 '10·10·10' 시행 : 도시별 문화예술 양성과 융성으로 소비 진작과 문화사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및 R&D 수퍼 밸리 양성 : 신성장동력 개발. 판교-용인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클러스터 개발. ICT, BT, AI, 핀테크, 블록체인, 빅 데이터, 드론 등을 특화 및 융합하여 경기를 세계 4차산업혁명 기술 단지로 육성.

3) 이홍우 후보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주거문제 등이 심각합니다.

첫째, 청년 공정 출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만 19세의 청년들에게 모두 300만 원을 나누어 줌으로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든 교육을 위해 사용하든 여행을 통해 스스로 삶을 기획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즉 청년 공정 출발지원금은 갭이어(안식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갭이어(gap year)는 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취업해 단기 저소득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자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새로운 환경에서 여행·봉사·인턴·창업 활동 등을 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재 3%에서 5%로 확대하겠습니다. 그 숫자는 얼마 안되지만 경기도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에 모범을 보임으로 민간부문에도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시장가

격에 기초한 건축비를 산정하여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택지를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청년공유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4) 홍성규 후보

- 청년 월세 10만 원 조례제정
- 도내 공기업 공무원 청년채용 확대 청년 쿼터제 도입
-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16세 이하
- 대학생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 <정치공동체- 지방정부,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는 도덕 원칙과 사회 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인 부패이다.”(사회적 관심 44항)

“국가의 도구인 공공 행정기관은 국가나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차원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있다. 여러 기관들의 조직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또 그 기관들이 모든 분야를 관리하려고 들면 들수록 이러한 정신에 위배되는 지나친 관료주의가 생겨난다. 결국 그러한 계획이나 사업들은 비인격적인 기능주의, 과도한 관료주의, 불의한 사리사욕, 안이하고도 일반화한 의무감의 해이로 그 효율성을 상실하고 만다.”(간추린 사회교리 412항)

6.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에 대해

- 1) 4명의 후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6-1.100% 기명 투표시행에 대해

- 1) 4명의 후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 주거와 복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과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내리는 결정은 당연히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과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간추린 사회교리 182항).

7.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지원 확대에 대해

- 1) 4명의 후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7-1.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해

- 1) 4명의 후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7-2 저출산 초고령화 대책에 대해

1) 이재명 후보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초등·아동 돌봄체계 구축과 같은 공보육 강화, 청년지원정책, 어르신의 건강, 일, 여가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김영환 후보

저출산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매우 저조한 현상임. 최근 미투 운동의 근본적 원인인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더해진 결과임. 사회와 가정마다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엄마가 일도 하고 육아까지 전담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원인 중 하나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 '아이 돌보미' 임금보전을 통한 육아 지원

-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보미'는 육아 가정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지만, 임금수준과 인력수급의 문제로 확산이 어려움.
- '보전금' 지원으로 육아 가정은 기존 부담만 유지하고, 돌보미는 물가상승 등으로 고려한 차액을 보충해 주는 효과
- 아이 돌보미 신원인증 및 관리, 교육연수 체계 등 '경기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 교육청과 협력해서 경기 전역 전면도입

- 일부 학교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아침 간편식'을 도내 초중고에 전면도입
- 등굣길 공복(空腹) 현황에 대한 실태 및 수요조사, 도 교육청 등과 협력 추진

3) 이홍우 후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육을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존에서는 대부분 여성이나 친정 부모 등이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서구에서도 나타났을 때 양육의 책임을 여성이 아니라 남녀가 평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에 '아빠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는 개인과 조직에 경기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0-12세까지 아동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4) 홍성규 후보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16년경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노인인구 20%) 이 추세로는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34%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높아져야 출산율이 높아짐. 또한, 불안 없는 노년에 대한 사회보장과 노령 전문인력의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어린이병원비부터 무상의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원-스톱 돌봄체계 구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

7-3 이주 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정책

1) 이재명 후보

-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문화 다양성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를 위해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의료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김영환 후보

- 다문화, 다인종, 남북한이 어우러지는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의 기본은 사람,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2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와 난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도내 공무원과 기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3) 이홍우 후보

2015년 기준 25만 명에 이르는 이주여성 중 약 3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3.8%는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주여성의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데도 이주여성 콜센터 상담원은 경기센터 7명, 전북 전주센터 6명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상담과 긴급 보호 등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수를 늘리고 그 역할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즉 가정폭력과 이혼 등에 따른 심리 정서 지원, 긴급 보호 등을 위한 전문상담 충분히 제공하며 쉼터 동반 입소 아동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등 다문화 가정지원 조례 운영도 내실화할 것이다.

4) 홍성규 후보

- 이주민 다문화가정 권리 보호 조례제정